

경제용어 정확히 쓰기 하우투 경제신문 1면에 단골로 나오는 통계 제대로 알고 쓰자



임현우 / 한국경제신문 기자

<7월 물가상승률 6.3%, 외환위기 이후 최악>, <미국 경제성장률,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원달러 환율 1,320원, 13년 만에 최고>….

국내외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경제지표를 전하는 기사가 많아졌다. ‘경제 뉴스 생산자’들에겐 매일 수많은 숫자가 쏟아진다. 이를 잘 선별해 꼼꼼한 분석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몰랐던 ‘특종 한 방’ 못지않게 좋은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준금리, 환율 등처럼 누구에게나 익숙한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집계 방식을 되짚어보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알기쉬운 금융’ 교육과정을 통해 소개한 주요 경제지표의 개념을 《신문과방송》 독자들과도 공유해보고자 한다.

■ 경제성장률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감률. 일정 기간 동안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분기 단위로 발표

경제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딱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단연 경제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정부에게는 경제정책 운용의 중요 목표이자, 결과를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이기도 하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실질 GDP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전 분기와 비교한 실질 GDP의 증감률이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미국은 전 분기 성장 추세가 1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해

환산한 연율(年率) 기준으로,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두 나라가 조금 특이한 사례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다.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 ‘명목’이 아닌 ‘실질’ GDP를 쓰는 이유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착시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경제학에서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NX)의 합계다.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도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등 항목별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률은 많은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최신 통계를 얼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속보치→잠정치→확정치의 순서로 공개한다. 속보치는 한 분기가 끝난 후 28일 안에 나오고, 잠정치는 좀 더 정확한 계산을 거쳐 70일 안에 발표된다.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률.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458개 품목을 정해 계산한다. 통계청이 월 단위로 발표

물가(物價)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이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가 물가지수다. 주요 물가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다. 보통 경제 뉴스의 ‘물가상승률’은 이 중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몇 %나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나타낸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한다. 가계가 많이 구입하는 458개 품목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기준연도(2020년) 물가를

100으로 잡고 상대적인 수준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21이고, 1년 전엔 110이었다고 하자. 물가상승률은 10%가 된다. 조사대상 품목에는 쌀, 라면, 사과, 삼겹살 같은 식료품부터 전세, 월세, 휘발유, 아파트관리비, 대중교통 요금, 학원비, 통신비 등까지 친숙한 것들이 두루 망라돼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 통계 자료에는 다양한 보조지표가 함께 등장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458개 품목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특성도 제각각인 만큼 일부 품목을 추려내 또 다른 통계를 이것저것 뽑아보는 것이다.

근원물가지수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계산한다. 농산물과 석유류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가격이 요동칠 때가 많다. 이걸 빼고 나머지 품목으로 지수를 작성하면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주 사는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와 과일, 채소, 생선 등 55개 품목만 보는 신선식품지수는 서민들의 체감 물가 파악에 유용하다.

■ 환율

서로 다른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매일 결정

경제신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헷갈리는 게 ‘환율’과 ‘원화 가치’가 반대라는 점이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과 똑같은 표현인데 언론사마다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쓰곤 한다. 우리나라처럼 개방된 경제구조일수록 환율이 미치는 영향력은 커진다. 항공사나 정유사의 경우, 다른 조건은 그대로이고 원·달러 환율만 10원 올라도 장부상 손실이 수백억 원씩 왔다 갔다 한다.

환율이 달라지면 ‘우산 장수와 부채 장수’라는 전래동화처럼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동시에 생긴다. 예를 들어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에는 호재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많아지니 이익이 늘어난다. 해외 판매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해진다. 다만 최근처럼 국제원자재 가격이 더 폭등하면 수출 기업에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수입이 많은 기업에는 당연히 악재다. 같은 상품을 수입해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해서다.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국내 가격을 올리거나 자체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환율 상승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떠나는 ‘셀 코리아’에 나설 수 있다. 기러기 아빠나 해외 직구족에게도 달갑지 않은 뉴스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은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 영향이 컸다. 올 들어 달러화 강세는 달러인덱스의 상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달러인덱스는 6개 주요 통화인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코로나, 스위스프랑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지수다.

■ 기준금리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시중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중앙은행이 연 8회 결정

‘은행들의 은행’ 격인 중앙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진 않지만 금융회사들과 자금을 거래하며 금융시장에 참여한다. 중앙은행이 이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도 이를 반영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대출 금리를 조절하게 된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다. 예컨대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푸는 효과가 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저축할 유인은 줄어들고,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소비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리면 국내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도 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고, 기존 외국인 투자자금은 빠져나가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기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부작용의 위험성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각국 기준금리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대로 인하한 것도 처음 있는 일였고, 올 들어 0.5%포인트를 단숨에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은 것도 한국은행에겐 최초였다. 미국에선 더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과 ‘울트라 스텝’(1%포인트 인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연 8회 열린다. 금융시장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지에 관심이 많아 ‘비둘기파(the doves)’와 ‘매파(the hawks)’로 분류해보기도 한다. 비둘기파는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통화완화론자들, 매파는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통화긴축론자를 뜻한다.

■ 가계부채

대출금, 외상 구매 등 가계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 한국은행이 분기 단위로 발표

부동산 ‘영끌’¹⁾과 주식·코인 ‘빚투’²⁾ 열풍 속에 국

1)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편집자 주

2)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편집자 주

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1,800조 원 선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였지만,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 사실 빚 자체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거나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 될 때다.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신용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모든 대출을 가리킨다. 판매신용은 카드사, 캐피탈회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정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이 가계신용에 포함된다. 실무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매달 발표하는 가계대출 동향, 5대 시중은행이 언론에 제공하는 대출 통계 등도 기사 작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리 급상승에 따른 위험계층으로 자주 언급되는 다중채무자란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을 뜻한다. 법정최고금리는 현행법상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몇 년에 한 번씩 인하될 때마다 ‘풍선효과’나 ‘시장 왜곡’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통계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여유가 많은 날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구경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 일반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홈페이지여서 자세하고 친절하다. 국내에서 작성된 웬만한 통계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지표의 개념과 조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기사 작성에 쓸쓸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의 ‘100

대 통계지표’에도 경제 뉴스에 등장하는 핵심 지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기업 출입이라면 금융감독원 DART(dart.fss.or.kr)와 친해져야 한다. 상장사의 재무제표나 공시 외에도 분기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등 항목을 보면 상품의 원가 구조, 시장 점유율과 경쟁 구도 등에 대한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다. 출입처에 따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 단체와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유용한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자

부처나 국회를 출입해본 적이 없다면 잠시 생소할 수 있지만, 경제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기까지의 기본적인 절차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뉴스 가치(value) 판단을 위해서기도 하고, 독자들이 헛갈리지 않게 기사를 쓰기 위해서기도 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법률을 바꾸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바꿀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이 한 없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 가지 법률 개정안을 놓고도 부처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일도 있다. 정책 추진의 전후 사정을 파악한 상태라면 발제와 취제가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